



수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어촌진흥 방안



신 영 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1. 우리나라 수산업 · 어촌의 당면 문제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 · 어촌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수산업과 어촌의 기반이 붕괴될지도 모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1980년대 이래로 계속되어 온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인구의 급감 및 노령화 현상으로 생산기반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즉 수산자원 경우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920만 톤이 어획되었으나, 2000년에는 790만 톤으로 급감했다가 최근에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연근해어업 수산자원량 및 어획량

(단위 : 만 톤)

구 분	1984	1992	2000	2008
수산자원량	920	820	790	835
어 획 량	124	108	110	12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그 결과 어가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수준이 낮으니까 교육, 문화 등 각종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어가인구는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50세 미만의 인구가 급감하는 등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표 2〉 부문별 평균 가구소득 추세

(단위 : 경상가격 천 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어가소득	28,028	30,006	30,668	31,176	33,945
(도시 대비)	(80.5)	(82.2)	(79.9)	(76.6)	(81.3)
농가소득	30,503	32,303	31,967	30,523	30,814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34,780	36,507	38,366	40,713	41,764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표 3〉 어가인구와 연령구성 추세

(단위 : 천 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2005~2009)
합 계	221.1	211.6	201.5	192.3	183.7	-4.5
50세 미만	70.2	58.1	47.3	40.3	28.8	-20.0
50세 이상	150.9	153.5	154.2	152.3	154.9	0.7
노령화 지수 (전국 평균)	266.7 (54.6)	298.5 (59.0)	339.2 (63.9)	350.5 (69.1)	409.1 (74.3)	-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주 : 노령화지수는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의미함

한편 수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역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 수산물수입이 급증하여 국내공급의 많은 부분을 외국수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1986년 수산물의 수입이 완전 개방된 이래 외국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해 왔는데 2001년에는 급기야 수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수입이 수출의 2배에 가까운 실적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공급량 중 수입수산물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생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국수산물의 수입이 수산물 공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산업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세계 무역질서가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WTO가 설립된 이후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 동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고, 금년 들어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 7월에 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WTO 수산물 협상은 보조금철폐와 관세인하의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의 논의 과정을 고려할 때 전자의 경우 면세유 공급가능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되고 있고, 후자는 관세의 대폭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셋째, WTO 협상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자 세계 각국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주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중국을 비롯하여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수산대국과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주로 관세인하가 주요 내용이 되고 있는데, 중국 등 주요 국가와 동 협상이 체결될 경우 가뜰이나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수입량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국내 수산업



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넷째, 최근 들어 계속 유류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수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많은 경영체가 경영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류가격의 상승은 중국 등 개도국의 경제발전으로 유류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유류가 전혀 생산되지 않고, 외국의 유전을 통한 유류확보를 역시 별로 높지 않아 국제유가의 변동에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선어업은 168개 산업 중 5번째로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으로서 유류가격은 어선어업의 경영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개도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관계없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현재와 같은 고유가시대에 있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경영체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까지 부가될 경우 어업경영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수산업의 다각화와 어촌진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산업 부문별로 기계화, 규모화 등을 통해 어업생산성을 높이는 방안과 다각화를 통해 생산 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이명박 정부 농수산

정책의 핵심과제로서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공급자 push 방식에서 수요자 pull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농어업을 6차 산업화하며, 농어업인이 주인이 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등의 3가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는 농식품 유통혁신, 핵심인력 양성, 식품산업 육성, 규제완화 및 추진방식 혁신의 4개를 들고 있는데 이중 수산업 다각화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농식품 유통혁신과 식품산업 육성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첫째,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산지유통을 주도할 마케팅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거래교섭능력을 확충하고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생산자 스스로가 해당 품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수산물 시군 유통회사로는 완도 전복주식회사가 있고, 수산물 대표조직으로는 넉치, 전복, 김이 있다. 유통혁신을 위한 두 번째 세부과제는 소비자에 있어 기존 유통망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직거래 채널을 확대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식품·외식업체로 하여금 식재료 공동구매를 유도하고 사 이버거래나 온라인 통합결제시스템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수산물의 경우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소평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수산회에서 인터넷수산시장 피쉬세일을 운영하고 있다. 유통혁신을 위한 마지막 과제는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수산물 경우 기존의 민간회사 외에 아직 신규로 설립된 회사는 없다.

다음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의 경영효율화를 지원하며, 한식세계화로 경제적 부가가치 및 국가이미지를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업 외에 새로운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천일염을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과 같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눈에 띈다.

3. 수산업 다각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수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농식품 유통혁신과 식품산업 육성을 주요 가제로 선정하고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일단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산물 유통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수산물 수입의 완전개방과 자유판매제 전면 실시를 계기로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즉 생산자-산지 위판장-반출상-소비자 도매시장-소매상-소비자로 대표되던 전통적인 유통경로가 쇠퇴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유통의 주요 주체로 부각되었고, 직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식품산업의 경우 수산물은 부패성이 심하여 예로부터 어떤 형태이건 가공이 이루어져 왔으나¹⁾ 최근 들어 그 형태가 고급화되고 특히 가공을 통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공은 국민경제적 관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한 연구²⁾에 의하면 수산물 가공 관련 산업은 원양 어업을 포함한 어선어업과 양식업은 물론 타 산업에 비해서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제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유발되는 생산효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생산유발계수는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 산업 평균이 1.85인데 반해 수산물 저장품이 2.57, 기타 수산물 가공품이 2.43, 수산물 통조림이 2.29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해당제품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영향력계수에 있어서도 전 산업 평균이 0.97인데 반해 수산물 저장품이 1.34, 기타 수산물 가공품이 1.27, 수산물 통조림이 1.19에 이르는 등 수산물 가공품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이에 대한 수산부문의 정책은 농업

부문과는 달리 뚜렷한 것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수산물 유통의 혁신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수산물 유통혁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산지 유휴위판장 정비사업이다. 1980년대 이후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1986년 산지에서의 강제상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산지 위판장을 경유하는 수산물이 감소하고 있고, 그 결과 많은 위판장이 유휴상태에 있거나 노후화 되고 있다. 즉 현재 전국 78개 수협에서 운영 중인 200여 개의 위판장 중 실제 위판장으로 지정된 곳은 160개소에 불과하고, 개설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곳이 전체의 70% 정도이며, 이중 절반은 20년 이상 경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판장의 1/3이 일부만 지붕이 있거나 아예 지붕이 없는 상태이고, 많은 위판장의 바다상태가 비위생적이며 선별장과 위판장이 분리되지 않아 이물질의 혼합이 우려되는 곳이 많다. 따라서 전국의 위판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지위판장의 기능을 전면 재정비 해나갈 필요가 있다. ① 시설보강 후 위판장으로 계속 활용이 가능한 곳은 계속 사용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②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산물 가공공장, 집하·선별장 및 간이처리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부패성이 심하므로 가능하다면 산지에서 가공·처리하든가 선별 또는 포장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 ③ 위판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매각하여 타 사업에 사용하든가 수협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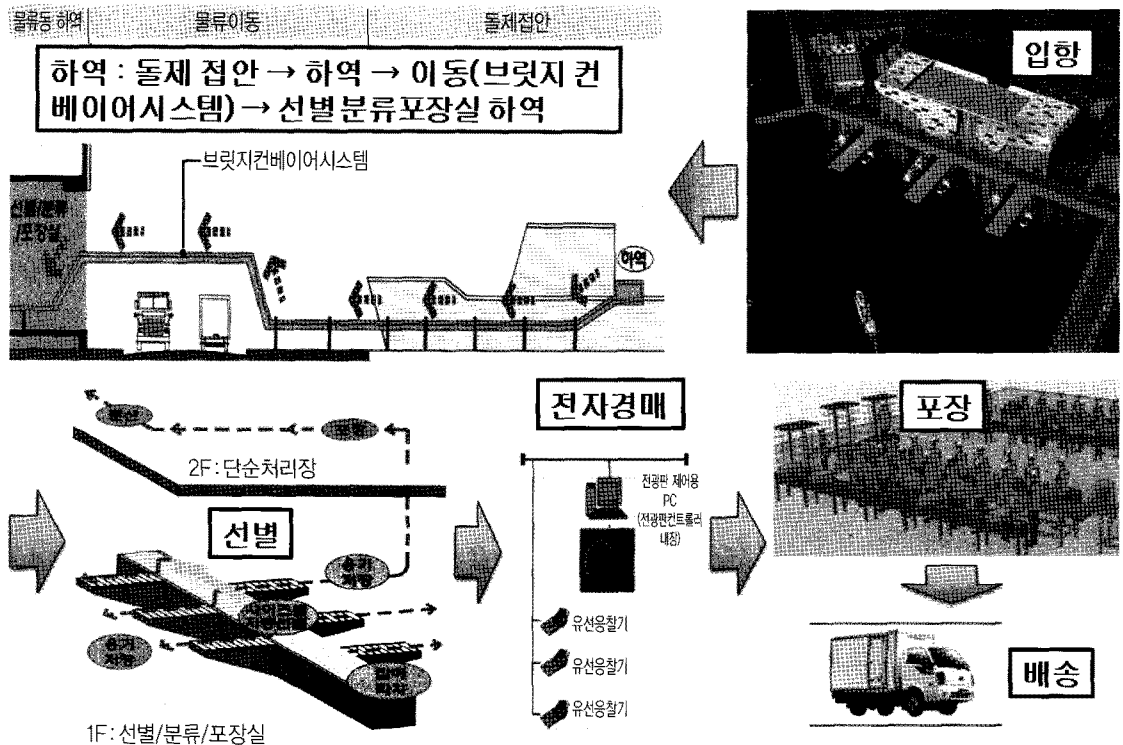
수산물 유통혁신과 관련한 두 번째의 과제는 산지 위판장에서의 양륙장비를 현대화 하는 것이다. 현재 산지에서의 수산물 양륙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선도유지가 되지 않음으로써 상품성 유지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아 경매 이후 위판장 바닥에 수산물을 부은 후 다시 선별·입상하는

1) 염장, 건조 등 간단한 방식의 가공을 저차가공, 통조림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가공하는 것을 고차가공이라 한다.
2)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등 위생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산지 양륙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양륙과정에서 어중에 따라 피쉬펌프를 이용할 수 있고,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선별실로 이동한다. 선별작업을 거친 수산물은 경매를 거치되 상품에 따라서는 전자경매방식을 도입하고, 경락된 수산물은 즉시 가공공장으로 이동하거나 포장 후 냉동차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지양륙장비의 현대화는 전국적으로 갖출 필요는 없고, 양륙량이 많은 중심 양륙항에 설치하되 양륙어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시설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중심 양륙항 주변에는 가공공장 등 관련 시설이 인접하여 입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재 침체해 있는 어촌지역의 진흥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산지양륙시설 현대화에 대한 기본 개념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수산물 유통혁신의 세 번째 과제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선어는 산지에서 대부분 경매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냉동물이나 건어물 등은 거의 수의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개인별, 지역별로 가격차가 크고, 가격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고 있으며, 대량처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유통경로가 다단계로서 유통마진이 높다. 따라서 1차적으로 냉동물과 건어물을 대상으로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앙관리소에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들은 단말기(또는 모니터)를 이용하여 경매에 참여하되 전국 동시경매(표본경매)가 가능하다. 경매대상 수산물은 굳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어선이나 창고 어디서나 일시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표준화와 등급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산물검사소 등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산지 양륙장비 현대화를 위한 개념도

낙찰된 수산물은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수송수단을 통해 구매자(낙찰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수송하고 구입대금은 온라인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냉동물과 건어물을 대상으로 한 전자경매제도가 확립될 경우 단순처리 되어 포장된 선어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물 유통혁신을 위해서는 소비자 도매시장의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활어 및 건어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중에서 형식적으로는 소매시장이면서 실제 도매시장 역할을 하는 곳이 여러 곳 있어 유통질서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 도매구역과 소매구역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재되어 있어 혼잡할 뿐 아니라 부산물이나 쓰레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기 하남 및 인천 활어시장, 광주 양동 해조류시장 등 실제로 도매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은 법정 도매시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매시장 구역 내에 도매구역과 소매구역의 분리를 의무화하되, 소매구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매시장은 소매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식품산업육성정책은 생산과 유통, 가공, 시장의 연계가 핵심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 이후의 단계가 매우 취약하다는데 있다. 보통 업종별 지구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 판매, 소비,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취약하다. 생산자 중심의 기존 접근방법은 산업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미흡하여 가공, 수출업계 등과 연계가 어렵고, 마케팅 등 사업능력의 부족으로 식품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 생산자의 역량강화와 클러스터화를 통한 복합산업화이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수산업과 관련된 제 기능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영세 생산자 혹은 생산자 단체 간의 조직적 규모화, 산·관·학·연의 연계를 통한 마케팅·R&D·홍보 등의 일관적 체계 확립이 가능하다. 현재 수산식품의 클러스터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북 익산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부산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내에도 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이들을 잘 활용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가공산업에 있어서도 이산화탄소 저감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식품에 대한 푸드마일(food miles) 감축 및 로컬푸드(local food)운동 등 저탄소 친환경 식품 소비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으며, 안전·안심할 수 있는 저탄소 친환경 웰빙 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향후 증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푸드 마일리지 표시제도와 수산식품 탄소라벨링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수산 부산물의 리사이클링(recycling)을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어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산물 유통혁신 및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방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수산업 다각화만으로 우리나라 어촌이 진흥되는 것은 아니나 어촌의 진흥을 위해서는 어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됨은 부인할 수 없다. 이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는 수산물 생산비용의 절감이나 생산된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전자보다는 후자, 즉 수산업의 다각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침체상태에 빠진 우리나라의 어촌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경우 지금까지 살펴 본 수산업 다각화 외에 어촌관광의 진흥이나 기타 지연산업(地緣産業)의 육성 또한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다른 정책을 통해 추진을 하고 있고,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사업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나라 어촌도 활력 있는 곳으로 진흥을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점차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